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제98차 회기

(2010. 3. 8. ~ 16.)

견해

진정사건번호 1593/2007 ~ 1603/2007

진 정 인 : 정의민, 오탈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 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대리인 : 해마루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재창)

피 해 자 : 진정인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07. 5. 15.(최초 제출일)

참 고 문 서 : 2007. 8. 5.자로 당사국에 전달된 특별보고관의 규정 제97호 결정
(서면으로 발행되지 않음)

견해채택일 : 2010. 3. 23.

주 제 : 양심적 병역거부

절 차 쟁 점 : 없음

본 안 쟁 점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규 약 조 항 : 제18조 제1항

선택의정서 조항 : 없음

2010. 3. 23.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진정사건번호 1593/2007 ~ 1603/2007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견해로 별첨 문서를 채택한다.

별 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제98차 회기)

다음 진정과 관련된

진정사건번호 1593/2007 ~ 1603/2007

진 정 인 : 정의민, 오탈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 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대리인 : 해마루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재창)

피 해 자 : 진정인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07. 5. 15.(최초 제출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0. 3. 23.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 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를 대리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사건번호 1593/2007 ~ 1603/2007에 관한 그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 진정의 진정인들 및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든 서면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견해

1.1 진정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민(진정사건번호 1593/2007), 오태양(진정사건번호 1594/2007), 염창근(진정사건번호 1595/2007), 나동혁(1596/2007), 유호근(1597/2007), 임치윤(1598/2007), 최 진(1599/2007), 임태훈(1600/2007), 임성환(1601/2007), 임재성(1602/2007), 고동주(1603/2007)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해마루 법률사무소의 오재창 변호사가 진정인들을 대리하고 있다.

1.2. 2010. 3. 23.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절차규정 중 규정 제94호 제2항에 따라, 그 실질적인 사실적·법적 유사성에 비추어 결정할 11건의 진정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사실

정의민 권

2.1.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진정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 및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으며, 그 결과 병역법 제88조(제1항)¹⁾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2005. 9. 1. 그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기소된 바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그 후 기각되었다.

2.2 2005. 11. 25. 대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주권을 보유한 국민에게 국방 및 병역의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또한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상 양심의 자유 및 헌법 제20조 상 종교의 자유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와 동일한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으로부터 면제 받을 피고의 예외적인 권리는 자유권규약 제18조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오태양 권

2.3 진정인은 불교신자이다.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1) 병역법 제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입영의 기피 (1)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현역입영의 경우에는 5일 [.....]”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4. 7. 15.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가능한 경우에, 법에 따른 의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수단의 제공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염창근 권

2.4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5. 4. 15.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에 기초하여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나동혁 권

2.5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4. 11. 12.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에 기초하여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유호근 권

2.6.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5. 6. 24.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에 기초하여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임치윤 권

2.7.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5. 1. 13.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에 기초하여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비록 군대 내 복무를 강제당하기보다는 형사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자신의 종교적 또는 양심적 결정이 확고하게 유지·고정된 사람들을 위해 병역 의무 대신에 대체복무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입법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가 아니며, 이러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처벌만을 규정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최진권 권

2.8.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5. 9. 15.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에 기초하

여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임태훈 권

2.9.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4. 11. 24.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에 기초하여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임성환 권

2.10.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4. 11. 24.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에 기초하여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과 같이, 징역형선고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또는 양심적 결정을 유지하는 강한 결의를 지닌 사람들에게 병역의 이행을 강제하기 보다는 의무적 병역을 대신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임재성 권

2.11.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5. 7. 28.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에 기초하여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고동주 권

2.12. 고동주는 평화주의자이고 천주교신자이다. 일자불상경, 당사국 병무청은 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법원에 대한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06. 12. 7.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에 기초하여 유죄판결 및 형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2.13. 2004. 8. 26.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진정과 관계없는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보호된 양심의 자유의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한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이고, 그러므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아니며, 어떤 사람이 법적 의무의 수행을 대신하는 대체복무 마련을 요구하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대체복무 마련을 요구할 권리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헌법은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 병역 의무의 이행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오직 헌법 스스로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²⁾

2.14.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진정인들은 매년 약 7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죄판결 및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99%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진정

3.1. 진정인들은 형사 기소 및 구금의 고통 하에서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 내에 없다는 점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3.2. 진정인들은 2006. 11. 3. 위원회에서 채택된 진정사건번호 1321/2004 및 1322/2004, 윤여범·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사건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견해를 인용한다. 이 견해에서 위원회는 현 진정사건들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4.1 2008. 11. 14. 답변서 제출을 통해서, 당사국은 윤여범·최명진 사건에서의 위원회의 견해³⁾를 언급하고 위원회가 당사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이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정사건들의 본안에 관하여 답변한다.

4.2 당사국은 위원회의 종전 결정 중 일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의무복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당사국 중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종전 결정에서의 위원회의 논거에 대하여, 당사국은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인 독일과 대만의 법제도가 당사국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분단된 채로 남아 있고, 독일에서 전쟁은 없었으며, 1990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

4.3 대만은 1955년 대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중국과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고, 1950. 6. 25.부터 휴전협정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1953. 7.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남한에서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0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그 가족과 헤어졌다. 당사국은 가슴 아픈 전쟁의 역사야말로 당사국 정부가 그 국가 정책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을 제시한다. 법적 측면에서, 당사국은 휴전협정이 당사국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대만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 구별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휴전협정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전(終戰) 선언이나 불가침 및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과 같은 새로운 법체계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있다. 당사국에 의하면, 당사국은 155마일에 걸쳐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환경이 독일이나 대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한 합정 간에는 1999. 6. 15.과 2002. 6. 19.에 발생한 다수의 충돌이 있

2) 비록 이에 따라 심판 대상 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하면서도, 다수 의견은 입법자에게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의 공익 간의 갈등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반대의견은,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당사국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대한 유보 없는 가입,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국가적 경험에 기초하여, 병역법의 관련 규정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의 부재라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3) 상기 참조

- 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양국 간 비교적 화해 상황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당사국이 방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구축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 4.4.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한 진정한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경우에, 그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위원회의 논거에 대하여,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국가적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당사국은 대체복무제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한반도의 70%가 산지이고, 이로 인해 게릴라전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지상 병력을 갖추는 데 더 큰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당사국의 군인 수는 약 117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58%에 불과한 약 68만 명이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15세부터 25세 사이의 남성 군인의 수가 상당히 감소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징병 예외 사례의 수용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 4.5. 당사국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종종 요구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나 자신의 학업이나 직업상 경력의 중단과 같은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따라서 충분한 지상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제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 당사국은 만약 국민적 합의 없이 병역에 대한 예외 주장을 수용한다면, 병역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문으로 이어져 병역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약화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병력 확보가 방해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예외는 모든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군 병력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예외 인정 요구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만약 당사국이 종교적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기초한 예외까지 수용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국을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병역 자원의 공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상호간 및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예외 인정의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 4.6. “국가적 측면에서 양심적 신념과 그 표현에 대한 존중은 그 자체로 사회 내에서 응집되고 안정된 다원주의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위원회의 논거에 대하여, 당사국은 독특한 안보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행이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의견이다. 양심적 신념과 그 표현에 대한 존중은 제도의 이행만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이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2005. 7.과 2006. 9.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 승인에 대하여 각각 72.3%와 60.5%의 반대의견이 나타났다. 당사국에 의하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민적 합의 없이 너무 일찍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보다 사회적 긴장을 강화할 수 있다.
- 4.7. 당사국은 의무적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제시한다. 당사국 군인 중 대다수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국가를 방어하는 그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에 직면한다. 실제로 최근 2002. 6. 19. 서해 연평도 인근의 남북한 해군 함정 간 충돌에서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므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불균형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에 앞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8. 당사국은 1990. 4. 10. 당사국의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시에, 위원회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범위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1993. 7. 30. 그 일반논평 제22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이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위원회의 입장을 공표했다. 당사국은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상 요건조항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당사국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한다.

4.9. 당사국은 2006. 4.부터 2007. 4.까지 국방부가 “민·관 합동의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설립했다고 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위원회는 장래 병력의 수급에 관한 전망, 병역거부자의 진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외국의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병역법 개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⁴⁾ 민·관 합동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는 현재 2008. 8.부터 12.까지 여론의 동향을 추적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4.10. 또한 2007. 9. 당사국은, 국민적 합의가 있는 때에, 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복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표했다. 당사국은 여론에 대한 연구 결과와 관련 부처·기관의 입장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위원회에 통보한다. 결론적으로, 당사국은 여기서 제시된 논거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재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당사국의 의견에 대한 진정인들의 주장

5.1. 2008. 11. 24. 서면 제출을 통해서,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에 답변했다. 국가안보에 관한 당사국의 논거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국가가 분단되어 있거나 실제로 휴전 중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는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독일은 통일 이전인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를 제공해오고 있고,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를 제공하고 있다.

5.2. 진정인들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계들이 34만 명의 남성이 당사국에서 병적에 편입된 반면에, 8천 명이 주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면제되었음을 증명한다. 병적에 편입된 사람들 중에서 27만 명의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한편, 다른 7만 명은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검찰청, 국내 방위산업체 및 다양한 연구소와 같은 “사회대체복무”에 종사했다. 병적에 편입된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체적 상태나 기능 그리고 병역에 대체하여 활용될 수 있는 자격 및 학위이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미 대체복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국이 현역으로 복무할 군인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게다가 국방부가 2006. 11. 4. 발행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당사국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2,577명의 군인들을 해외로 파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5.3. 진정인들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매년 700명 미만으로, 각각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

4) 당사국은 이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았다.

인의 0.26%, 현역 외에 복무하는 군인의 1%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도입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당사국의 논거는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다. 북한에 대한 안보 우려와 관련된 논거에 대하여, 진정인은 당사국의 인구가 북한의 거의 2배에 이르고, 당사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약 30배라는 점을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항상 위성의 감시 하에 있다. 게다가 당사국의 국방예산이 2006년에 157억 달러인 반면에 북한의 국방예산은 같은 해에 29.4억 달러로 평가되며, 당사국이 수년 동안에 걸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온 사실 등을 전제로 하면, 이와 관련된 당사국의 논거는 신빙성이 없다.

5.4. 의무복무제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 징병의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당사국의 논거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다 100배 정도 많은 7만 명의 사람들이 현역이 아닌 형태로 그 병역을 수행한다는 점을 재차 주장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불공평성에 대한 당사국의 우려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사회대체복무”의 일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별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2007. 9. 18.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했다: 1) 복무는 항상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알츠하이머 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사회대체복무” 중 가장 힘든 것이어야 하고, 2) 이러한 유형의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3) 복무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의 2배 정도 긴 기간이어야 한다. 진정인들에 의하면, 더욱 어렵고 힘든 성격의 조건들이 부가된다면, 오직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만이 이러한 복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의 채택이 병역제도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거나 불공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독일이나 대만에서 경험되지 않았다.

5.5.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당사국의 논거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2005년 및 2006년에 실시된 조사 통계만 인용하고, 다수가 특별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2007년 조사결과(52%)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지난 정부에서 인용되었고, 위 4.10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특별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한 의도를 지지하는 논거로 진보적 정당(열린우리당)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정부는 윤여범 ·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사건에서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위원회의 견해에 의해 고무되었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후 그 입장을 변경했고, 새로운 견해를 뒷받침할 이전의 조사들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보수적 정당(한나라당)이 2008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국방부는 그러한 폭넓은 특별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5.6.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함으로써 당사국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과 다원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전과기록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회적 및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사기업에 입사할 자격이 없다.

5.7.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윤여범 ·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사건에서의 위원회의 견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유형의 대체복무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은 단순히 총기와 관련된 4주간의 훈련과정을 제거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다. 진정인들은 또한 자유권규약 제18조가 비상사태 기간 중에도 침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러므로 국가안보에 관한 당사국의 논거는 근거가 없다.

쟁점 및 위원회의 심리절차

심리적격 심사

- 6.1. 진정에 포함된 청구를 심리하기 전에, 위원회는 그 절차규정 제93조에 따라 자유권규약 선택의 정서에 따른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6.2. 진정의 심리적격에 대한 당사국의 반대가 없고, 위원회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심리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청구가 심리적격이 있다고 선언한다.

본안 심사

- 7.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을 심리했다.
- 7.2. 위원회는 당사국에 의무적 군복무에 대한 대체수단이 없고 그 결과로 그들이 병역을 불이행하면 형사기소와 구금에 이른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유사한 사건들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선고는 그들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능력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3항의 의미 내에서 문제된 제한이 필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 종전의 결정례를 상기한다.⁵⁾
- 7.3.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당사국이 종전의 진정들에 대한 답변으로 위원회에 제출했던 주장들, 특히 국가안보, 군대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및 사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 결여에 관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종전의 견해에서 위원회가 이러한 논거들을 이미 심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위원회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 7.4. 위원회는, 의무적 군복무를 위해 징집되는 것에 대한 진정인들의 거부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진정하게 유지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의 직접적 표현이었다는 점과 진정인들에 대한 그 후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그들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능력에 대한 제한에 해당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된 제한이 필요했다는 점을 자유권규약 제18조 제3항의 의미 내에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8.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들이, 각 진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보여준다고 결정한다.
9.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a)호에 따라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
10.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과 자유권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그 영토 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권규약 상 인정된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를 공표할 것을 요청한다.

5) 윤여범·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번호 1321/2004 및 1322/2004, 2006. 11. 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United Nations

CCPR/C/98/D/1593-1603/2007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str.: Restricted*
30 April 2010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Ninety-eighth session

8 to 26 March 2010

Views

Communications Nos. 1593 to 1603/2007

Submitted by:

Messrs. Eu-min Jung, Tae-Yang Oh, Chang-Geun Yeom, Dong-hyuk Nah, Ho-Gun Yu, Chi-yun Lim, Choi Jin, Tae-hoon Lim, Sung-hwan Lim, Jae-sung Lim, and Dong-ju Goh. (represented by counsel Jea-Chang Oh of Haemaru Law Offices)

Alleged victims:

The authors

State party:

The Republic of Korea

Date of the communications:

15 May 2007 (initial submissions)

Documentation references:

Special Rapporteur's rule 97 decision, transmitted to the State party on 5 October 2007 (not issued in document form)

Date of adoption of Views:

23 March 2010

* Made public by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CCPR/C/98/D/1593-1603/2007

<i>Subject matter:</i>	Conscientious objection.
<i>Procedural issues:</i>	None.
<i>Substantive issues:</i>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Articles of the Covenant:</i>	18, paragraph 1.
<i>Articles of the Optional Protocol:</i>	None.

On 23 March 2010, the Human Rights Committee adopted the annexed text as the Committee's Views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in respect of communications Nos. 1593 to 1603/2007.

[ANNEX]

ANNEX**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inety-eighth session)**

concerning

Communications Nos. 1593 to 1603/2007**

Submitted by: Messrs. Eu-min Jung, Tae-Yang Oh, Chang-Geun Yeom, Dong-hyuk Nah, Ho-Gun Yu, Chi-yun Lim, Choi Jin, Tae-hoon Lim, Sung-hwan Lim, Jae-sung Lim, and Dong-ju Goh. (represented by counsel Jea-Chang Oh of Haemaru Law Offices)

Alleged victims: The authors

State party: The Republic of Korea

Date of the communications: 15 May 2007 (initial submissions)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Meeting on 23 March 2010,

Having concluded its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s Nos. 1593 to 1603/2007, submitted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behalf of Messrs. Eu-min Jung, Tae-Yang Oh, Chang-Geun Yeom, Dong-hyuk Nah, Ho-Gun Yu, Chi-yun Lim, Choi Jin, Tae-hoon Lim, Sung-hwan Lim, Jae-sung Lim, and Dong-ju Goh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ving taken into account all written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authors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State party,

Adopts the following:

Views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1.1 The authors of the communication are Messrs. Eu-min Jung (Communication no. 1593/2007), Tae-Yang Oh (Communication no. 1594/2007), Chang-Geun Yeom (Communication no. 1595/2007), Dong-hyuk Nah (Communication no. 1596/2007), Ho-Gun Yu (Communication no. 1597/2007), Chi-yun Lim (Communication no. 1598/2007), Choi Jin (Communication no. 1599/2007), Tae-hoon Lim (Communication no. 1600/2007),

**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Committee participated in the examination of the present communication: Mr Abdelfattah Amor, Mr. Lazhari Bouzid, Ms. Christine Chanet, Mr. Mahjoub El Haiba, Mr. Ahmad Amin Fathalla, Mr. Yuji Iwasawa, Ms. Helen Keller, Mr. Rajsoomer Lallah, Ms. Iulia Antoanella Motoc, Mr. Michael O'Flaherty, Mr. José Luis Pérez Sanchez-Cerro, Mr. Rafael Rivas Posada, Sir Nigel Rodley, Mr. Fabián Salvioli, Mr. Krister Thelin and Mrs. Ruth Wedgwood.

CCPR/C/98/D/1593-1603/2007

Sung-hwan Lim (Communication no. 1601/2007) , Jae-sung Lim (Communication no. 1602/2007), and Dong-ju Goh (Communication no. 1603/2007), all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The authors are represented by counsel, Mr. Jae-Chang Oh of Haemaru Law Offices.

1.2 On 23 March 2010, pursuant to Rule 94, paragraph 2, of the Committee's Rules of Procedure, the Committee decided to join the eleven communications for decision in view of their substantial factual and legal similarity.

The facts as presented by the authors

Mr. Eu-min Jung's case

2.1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Mr. Jung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¹. On 1 September 2005, he was convicted as charged by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and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of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subsequently rejected.

2.2 On 25 November 2005, the Supreme Court upheld Mr. Jung's conviction and sentence, reasoning *inter alia*, that,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law", charging the citizens who hold the sovereignty with the constitutional duty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service, and it is justifiable in that they are necessary for the sake of the citizens of the state. [...] Also as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which Korea is a State member appears to cover the same extent to which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under freedom of conscience in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and under the freedom of religion in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exceptional right of the defendant to be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88 paragraph 1 of Military Service Act is not derived from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Mr. Oh's case

2.3 Mr. Oh is a Buddhist.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¹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provides as follows: "Evasion of Enlistment (1) Persons who have received a notice of enlistment or a notice of call (including a notice of enlistment through recruitment) in the active service, and who fails to enlist in the army or to comply with the call,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ollowing report period from the date of enlistment or call,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1. Five days in cases of enlistment in active service [...]"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15 July 2004,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that,

“freedom of conscience is merely a right to request the state to consider and protect the individual’s conscience, if it is possible, it cannot be the basis for refusing to carry out the duties under the law or request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ways to replace such duties.”

Mr. Yeom

2.4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15 April 2005,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of similar reasoning a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Mr. Dong-hyuk, Nah

2.5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12 November 2004,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of similar reasoning a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Mr. Ho-Gun, Yu

2.6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24 June 2005,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of similar reasoning a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Mr. Chi-yun Lim

2.7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13 January 2005,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of similar reasoning a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However, it also stated that “Although it is desirable to adopt a system of alternative service in place of military duty for those who firmly maintain and stick to their own religious or conscientious decision even facing the criminal penalty, rather than forcing them to serve in the army, this legislation is not a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Military Service Act which provides only for the punishment does not provide such an exception is not an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

CCPR/C/98/D/1593-1603/2007

Mr. Jin Choi

2.8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15 September 2005,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of similar reasoning a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Mr. Tae-hoon Lim

2.9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24 November 2004,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of similar reasoning a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Mr. Sung-hwan, Lim

2.10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13 January 2005,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of similar reasoning a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However, it also stated that "Under the current law system,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to replace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rather than forcing those who, like the defendant, have a strong determination to maintain a religious or conscientious decision in spite of the prison sentences to perform the military service."

Mr. Jae-sung, Lim

2.11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28 July 2005,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of similar reasoning a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Mr. Dong-ju Goh

2.12 Mr. Dong-ju Goh is a pacifist, Roman Catholic. On an unspecified date, the State party's Military Power Administration sent him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his religious belief and conscience, he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hereupon he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article 88 (section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a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as rejected. On 7 December 2006,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n the basis of similar reasoning a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13 On 26 August 2004, in a case unrelated to the current communic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by a majority, a constitutional challenge to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on the grounds of incompatibility with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urt reasoned, *inter alia*:

"the freedom of conscience as expressed in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grant an individual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Freedom of conscience is merely a right to make a request to the State to consider and protect, if possible, an individual's conscience, and therefore is not a right that allows for the refusal of one's military service duties for reasons of conscience nor does it allow one to demand an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 to replace the performance of a legal duty. Therefore the right to request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 cannot be deduced from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Constitution makes no normative expression that grants freedom of expression a position of absolute superiority in relation to military service duty.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can be recognised as a valid right if and only if the Constitution itself expressly provides for such a right".²

2.14 Following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and Constitutional courts, the authors state that some 700 conscientious objectors are being sentenced and imprisoned annually for one and a half years. More than 99% of these conscientious objectors are Jehovah's witnesses.

The complaint

3.1 The authors complain that the absence in the State party of 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under pain of criminal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breaches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3.2 The authors refer to the Committee's Views in Communication nos. 1321/2004 and 1322/2004,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in which the Committee found a violation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by the State party, on the basis of similar facts as in the present communications and in which the State party was obliged to provide the authors with an effective remedy.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merits

4.1 By submission of 14 November 2008, the State party responds on the merits of the communications, referring to the Committee's Views in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³ and requesting the Committee to reconsider this decision taking into account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State party.

4.2 The State party focuses on specific aspects of the Committee's earlier decision. As to the Committee's argument therein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s parties to the

² While accordingly uphol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tested provisions, the majority directed the legislature to study means by which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public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could be eased. The dissent, basing itself on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2, the absence of a reservation by the State party to article 18 of the Covenant, resolutions of the (then)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State practice, would have fou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Military Services Act unconstitutional, in the absence of legislative effort to properly accommodate conscientious objection.

³ *Supra*.

CCPR/C/98/D/1593-1603/2007

Covenant, which have retain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ve introduced alternatives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the State party points out that the legal systems of Germany and Taiwan, countries which have introduced alternative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tate party. The State party remains divided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re was no war in Germany and reunification was achieved in 1990.

4.3 Taiwan never waged war against China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aiwanese government in 1955. The Korean War was fought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lasted for three years and a month from 25 June 1950 to July 1953, when a cease-fire agreement was finally signed. It left one million dead from the south and more than 10 million Koreans wer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t the end of the war.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its painful history of war constitutes one of the reasons why its government places such emphasis on national security as the most significant priority in its national policy agenda.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a cease-fire agreement is still effective in the State party, which distinguishes it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Taiwan. This agreement has not yet been superseded by a new legal framework such as a declaration ending the war or a peace agreement to ensure non-aggression and peace, despite the continued efforts to this end. In the State party’s view, the security environment is not comparable to that of either Germany or Taiwan, as it is bordered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ich spans 155 miles. There have been numerous clash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vessels, which occurred on 15 June 1999 and 19 June 2002. Thus, this demonstrates that the outbreak of war remains a possibility even in the midst of a relatively reconciliatory environ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affirms the State party’s need to build military means for the purposes of defense.

4.4 As to the Committee’s argum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failed to show what special disadvantage would be involved for it if the rights of the authors under article 18 were fully respected”,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conscience objection or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 is close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which is the very prerequisite for national survival and the liberty of the people. It fears that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would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It highlights that 70% of the Korean Peninsula is mountainous, making it all the more necessary to be equipped with enough ground forces to face guerrilla warfare. However, the number of soldiers in the State party remains at around 680,000, only 58% of that of the DPRK, which amounts to about 1,170,000 and between 2000 and 2005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umber of male soldiers between 15 and 25 years.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and makes it even more difficult to accept cases of exception from conscription.

4.5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there have always been those who are intent on “evading” conscription due to the relatively challenging conditions often required in the military, or concern over the effect such an interruption will have on one’s academic or professional career. Thus, it is even more necessary to maintain its current system of a no-exception policy in mandatory military service to ensure sufficient ground forces. It submits that if it were to accept claims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in the absence of a public consensus on the matter, it would be impeded from securing sufficient military manpower required for national security by weakening the public’s trust in the fairness of the system, leading the public to question its necessity and legitimacy. In addition, any exceptions based on religious belief would have to apply to people of all religious faiths and, given that persons of religious faith account for a significant part of the military forces, concerns about the proliferation of requests for exemptions are not groundless. The situation would be further aggravated if the State party were to accept exemptions based on personal conscience alone rather than on a religious basis. Thus, for the State party,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s should be preceded by a series of measures: stable and sufficient provisions

of military manpower; equality between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as well as with those without; in-depth studies on clear and specific criteria for recognition of an exemption and consensus on the issue among the general public.

4.6 As to the Committee's argument that, "respect on the part of the State for conscientious beliefs and manifestations thereof is itself an important factor in ensuring cohesive and stable pluralism in society", the State party is of the view that as a unique security environment prevails, fair and faithful implementation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is a determining factor to secure social cohesion. Respect for conscientious beliefs and its manifestation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nfor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alone. It is sustainable only if general agreement on this issue has been achieved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A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in July 2005 and in September 2006 shows that 72.3% and 60.5% respective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recognition of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States party's view, the introduction of such an arrangement at a premature stage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public consensus, would intensify social tensions rather than contribute to social cohesion.

4.7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it is a very difficult task to set up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practice, guaranteeing equality and fairness between those who perform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those wh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The majority of the soldiers of the State party perform their duties under difficult conditions and some are involved in life-threatening situations. They face the risk of jeopardizing their lives while performing their duty of defending the country. Indeed, six people died and nineteen were wounded in the recent clash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naval vessels near Yeonpyeong-do in the Yellow Sea on 19 June 2002. Thus, it is almost impossible to ensure equality of burden with those fulfilling military service and thos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Assuming that this disparity will continue to exist, it is imperative to gain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before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4.8 The State party regrets that upon its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on 10 April 1990, the Committee had not provided a clear position on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fell within the ambit of article 18. It was only on 30 July 1993, in its General Comment 22, that the Committee announced its position that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s a breach of this provision. It refers to the decisions of both its Supreme and Constitutional Courts to the effect that the failure to introduce a system at the present time cannot be interpreted as a breach of the Covenant, and that the requisite articl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is constitutional.

4.9 The State party informs the Committee that from April 2006 to April 2007, the Ministry of Defense set up a "Joint Committe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research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is Committee conducted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revising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cluding prospects for the future demand and supply of military personnel, the statements of those who refused military service, the opinions of experts in this field and relevant cases of foreign countries.⁴ It is now conducting research with the aim of following the trend of public opinion from August to December 2008.

4.10 In addition, in September 2007, the State party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a system assigning social services to those who refuse conscription due to their religious

⁴ The State party has not provided any indication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CPR/C/98/D/1593-1603/2007

beliefs once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is issue. The State party informs the Committee that once there is such consensu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on public opinion and position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then it will consider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conclusion, it requests the Committee to reconsider its previous view on this matter in light of the arguments presented herein.

Authors' comments on the State party's observations

5.1 By letter of 14 November 2008, the authors responded to the State party's submissions. On the States party's arguments on national security, the authors argue that security is an important issue for all countries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y are divided or there is a cease-fire in place. Germany has been providing alternative service since the 1960s, thus even before unification, and Taiwan has also done so despite its being dominated by China.

5.2 According to the authors, the official statistics demonstrate that while 340,000 men were enlisted in the military service in the State party, 8,000 were exempted, mostly due to physical disability. Among those enlisted, 270,000 soldiers serviced in military barracks, while another 70,000 served in “social alternative services”, such as public offices, police stations, fire stations, public health centres, prosecutors' offices, national defense-related factories and various laboratories. The criteria for dividing those enlisted were physical state or skill, and qualification and academic degrees, which can be utilized in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The fact that such a high number do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s already, demonstrates that the State party is not short of soldiers to service in military barracks. In addition, it notes that according to a “Defense White Paper, issu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4 November 2006, the State party has dispatched as many as 2,577 soldiers overseas even though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State party.

5.3 According to the authors, the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is less than 700 annually, amounting to 0.26% and 1% of soldiers serving in and outside military barracks, respectively. Thus,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 adoption of alternative service would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is unreasonable and groundless. As to the arguments relating to security concerns with the DPRK, the authors argue that the State party's population is almost twice as large and its economy thirty times as large as that of the DPRK. Also, the DPRK has been under constant satellite surveillance. In addition, given that the defense budget of the State party was 15.7 billion dollars in 2006, whereas that of the DPRK was estimated at 2.94 billion dollars in the same year,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 has reduced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over the years, the State party's arguments in this regard are not credible.

5.4 As to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a no-exception policy in a mandatory system is essential in order to minimize evasion from conscription, the authors reiterate that 70,000 people have undertaken their military service outside military barracks, which is 100 times larger than that of conscientious objectors. Thus, the State party's concern about the inequalities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ould not arise. They also referred to an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18 September 2007, that the State party would pursue a plan of permitting conscientious objectors special alternative service as part of “social alternative service”, on condition that: 1) service should be the toughest of “social alternative service”, such as, looking after Alzheimer patients or the highly disabled who need intensive care all the time; 2) those availing of this type of service should remain at the designated facility rather than commuting to their homes; and 3) the service should be twice as long as for those who serve in military barracks. According to the authors, given the more challenging and demanding nature of the conditions attached, it is likely that only genuine conscientious objectors would apply

for this service and it is not reasonable to suppose that the adop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ould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military system or raise issues of inequality. This has not been the experience in either Germany or Taiwan.

5.5 As to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re is no "public consensus" on this issue, the authors argue that the State party has only referred to statistics from surveys carried out in 2005 and 2006 and did not mention those of 2007, which demonstrate a majority for such special alternative service (52%). This figure was quoted by the former government, and adopted by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y (the Open Democratic Party) as the reasoning behind its wish to incorporate special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ce objectors as set out in para 4.10 above. The government had been inspired by the Committee's Views in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such a step. However, the government subsequently changed its view and began quoting earlier surveys to support its new opinion. When the conservative party (the Grand National Party) took power in 2008,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cided to postpone introduction of such an expanded special alternative system.

5.6 The authors submit that by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tate party would be protecting minority rights and contributing to integration and pluralism in society. Due to the criminal recor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hey suffer from social as well as economic disadvantages. For example, they are not eligible to be appointed as public officers or to join private companies.

5.7 The authors argue that the State party has an obligation under article 18 of the Covenant, as demonstrated in its Views in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to grant alternative service to conscientious objectors. As various forms of such alternative service already exist, the State party could do so by simply removing the four-week training course concerning firearms. They also refer to the fact that article 18 is a non-derogable right even during times of emergency and hence the State party's arguments on national security are groundless.

Issues and proceedings before the Committee

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6.1 Before considering any claims contained in a communication, the Human Rights Committee mu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3 of its rules of procedure, decide whether or not it is admissibl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6.2 In the absence of objection by the State party to the admissibility to the communication, as well as any other reason whereby the Committee should declare the communication inadmissible in whole or in part, the Committee declares the claims under article 18 of the Covenant admissible.

Consideration of the merits

7.1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present communication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parties, as provided i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Optional Protocol.

7.2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of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due to the absence in the State party of 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s result of which their failur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resulted in their criminal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jurisprudence, in similar cases against the State party, that the authors' conviction and sentence amounted to a restriction on their ability to manifest their religion or belief and

CCPR/C/98/D/1593-1603/2007

that, in those cases, the State party had not demonstrated that the restriction in question was necessar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8, paragraph 3.⁵

7.3 The Committee notes that in the present cases the State party reiterates arguments advanced in response to the earlier communications⁶ before the Committee, notably on the issues of national security, equality between military and alternative service, and lack of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atter.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it has already examined these arguments in its earlier Views⁷ and thus finds no reason to depart from its earlier position.

7.4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s' refusal to be drafted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as a direct expression of their religious beliefs which, it is uncontested, were genuinely held and that the authors' subsequent conviction and sentence amounted to an infringement of their freedom of conscience and a restriction on their ability to manifest their religion or belief. The Committee finds that as the State party has not demonstrated that in the present cases the restrictions in question were necessar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8, paragraph 3, it has violated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8. The Human Rights Committee, acting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cludes that the facts before the Committee reveal, in respect of each author, viol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9.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3 (a),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provide the authors with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compensation.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avoid similar violations of the Covenant in the future.

10. Bearing in mind that, by becoming a party to the Optional Protocol, the State party has recognized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venant or not and that,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has undertaken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and to provide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remedy in case a viola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Committee wishes to receive from the State party, within 180 days,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e Committee's Views. The State party is also requested to publish the Committee's Views.

[Adopted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English text being the original version. Subsequently to be issued also in Arabic, Chinese and Russian as part of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⁵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 1321/2004 and 1322/2004,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⁶ Ibid.

⁷ Ibid.